

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. 11. 30.

행 정 재 무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장 영 교

1. 제안요지

- 가. 의안번호: 제1694호
- 나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. 11. 16.
- 가. 회부일자: 2021. 11. 18.

2. 제안이유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행정 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추가·삭제·보완(안 제2조)
- 나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, 제7조 및 제7조의2)
 - 1) “행정정보의 공포”를 “정보의 사전적 공개”로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변경
 - 2)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개정

3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

다.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

(안 제7조 ~ 제8조까지)

1) 위촉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명시

2) 이의신청 제외조항 일치

라.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(안 제7조의3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,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, 별첨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1. 10. 7. ~ 10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안취지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행정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2조에서는
 - “행정정보”의 정의를 추가하고, “처리부서”의 정의를 보완하였으며
 - 안 제5조에서는
 - “행정정보의 공표”를 “정보의 사전적 공개”로 용어를 풀어쓰고
 - 안 제7조에서는
 -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규정하고
위촉직 위원 연임은 1회에 한함을 규정함
 - 안 제7조의 2, 제7조의 3에서는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함
-
-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한 바 있으며,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“정보공개심의회”의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 -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안 제3조에서는 “행정정보”의 정의를 추가하고 “처리부서”의 정의를 보완하였으며 “공표”란 용어를 “사전적 공개”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도록 변경하고자 본 조항에서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풀어씀
 - 또한,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 그리고 기능과 위원에 대한 내용을 개정·신설한 안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는 개정된 상위법의

내용을 반영한 것으로, 정보공개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하고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명시하였으며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과 해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영됨

- 또한, 안 제8조제2호의 가목 ‘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’과 라목 ‘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’이 중복되는 사항이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 제외조항과 일치하고자 ‘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’라고 변경함
- 최근 3년간 우리 성동구의 정보공개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2,681건, 2019년 3,339건, 2020년 3,130건으로 총 9,150건에 해당하고 있어 향후 조례개정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정보공개 행정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, 상위 법령과의 조화 및 조례 활용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됨

＜ 관계법규 ＞

붙임 1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, 지리적 여건,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(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·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.